

기업승계와 선순환 경제위한 상속·증여제도 개선방안

2024년 8월 29일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



- 목 차 -

I 현황과 문제점

II 상속·증여세 개편방안

III 맺음말





현황과 문제점



□ 공직자의 편법 증여 의혹, **MORAL HAZARD** or **RATIONAL CHOICE**?

산업장관 후보 軍면제, 배우자 부동산투기, 자녀 편법증여 의혹
법무장관 후보자, 아내 편법증여 의혹에 "집사람이 남편 기 살려준다고.."

[단독]"부동산 투자 안 된다"던 안창호, 자녀 편법 증여의혹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장남에게 수십억원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시세보다 4억원 정도 싸게 판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장남은 전세를 끼고 샀는데 차액이 10억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숙연, 63배 시세차익 자녀 '아빠찬스' 논란에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송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큰딸이 '아빠 찬스'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부동산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차남 편법 증여 덮기 위해 차용증 위조했나?

무일푼 딸, 아빠 회삿돈으로 27억 아파트 매수...

□ 편법과 위법의 경계: 부의 대물림은 불공정한 특권 세습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세금 탈루’ ... 위법만 안 나오면 공정한가

동아일보 [김순덕의 도발]

‘아빠 찬스’가 아니라 나라 망칠 특권 세습이다

[서울광장] 아빠 찬스의 나라

아빠 찬스, 사회 불평등의 근원 편법 미성년자 투자 규제하고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금수저 아닌 흙수저 신화 가능

10대가 10억짜리 집 매입...편법 증여·탈루 의심 3019건 적발

특수관계인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도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 '조세 국가경쟁력'과 '부의 국제적 이동'

상속세 때문에 이민가는 기업 회장들 | 상속세, 가업승계

[엑시트 코리아] "그곳엔 세금 세가지가 없다" 韓부자들 이민 많이 가는 나라

중앙일보 | 입력 2024.07.18 05:00 업데이트 2024.07.18 17:17

국내 사업가가 가장 선호하는 행선지는 싱가포르다. 상속 · 증여 · 배당소득세 등 3대 세금이 없고,

"맘 편히 죽으러 이민간다"... 자녀들도 안 말린다는데 한국부자 1200명 '엑소더스',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를 피해 고소득층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주식 매각차익을 제외하면 해외 이민을 갈 때 갖고 나가는 자산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로 향하는 부자들이 부쩍 늘어난 이유다.

□ 상속·증여세의 대중화: 부자는 절세, 서민은 탈세로 조세 형평성 훼손

'중산층 세금' 된 상속세 대수술... 자녀 공제 5000만원→5억 [2024 세법개정안]

'1% 부자'의 전유물이었던 상속세 집값 오르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화

野임광현,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당론 채택 전망

이재명 대표, 연임 일성 상속세 완화 필요성 언급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중산층 없어야"

[사설] 이재명도 맞장구친 상속세 완화...이참에 증여세도 손 봐야

한국경제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증여세 손질 없이 상속 공제만 늘리면 노인 부모가 노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이른바 '노노(老老) 상속'만 부추길 뿐이다. 증여를 통해 사회 전체의 부가 노인 세대에서 젊은 층으로 자연스럽게 이전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세대 갈등을 줄이고 경제활력도 높이는 길이다. 증여를 '부모 찬스'로 여기는 국민 정서의 영향으로 증여세의 배우자공제(6억원)는 2008년부터, 자녀공제(성년 5000만원)는 2014년부터 10년 이상 그대로다.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 상속세뿐 아니라 증여세 개정도 논의해보길 바란다.

조기 증여 급증, "빨리"가 최고의 증여 절세 비법

□ 상속·증여세가 기업승계 걸림돌

상속세 폭탄에 매각되는 강소기업들...가업승계보다 M&A

M&A를 선택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다. △ 후계자가 없을 경우 △ 중소기업 재무가 악화돼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경우 △ 50% 이상 상속증여세가 부담스러울 경우 △ 전문경영인을 찾는 경우 등이다.

"주식 물납하고 회사 넘겨야 하나요"... 늙은 중소기업의 고민

높은 세율에 '꼼수 증여' 빈번 가업상속공제, 혁신 걸림돌 줄폐업 우려... 800조 시한폭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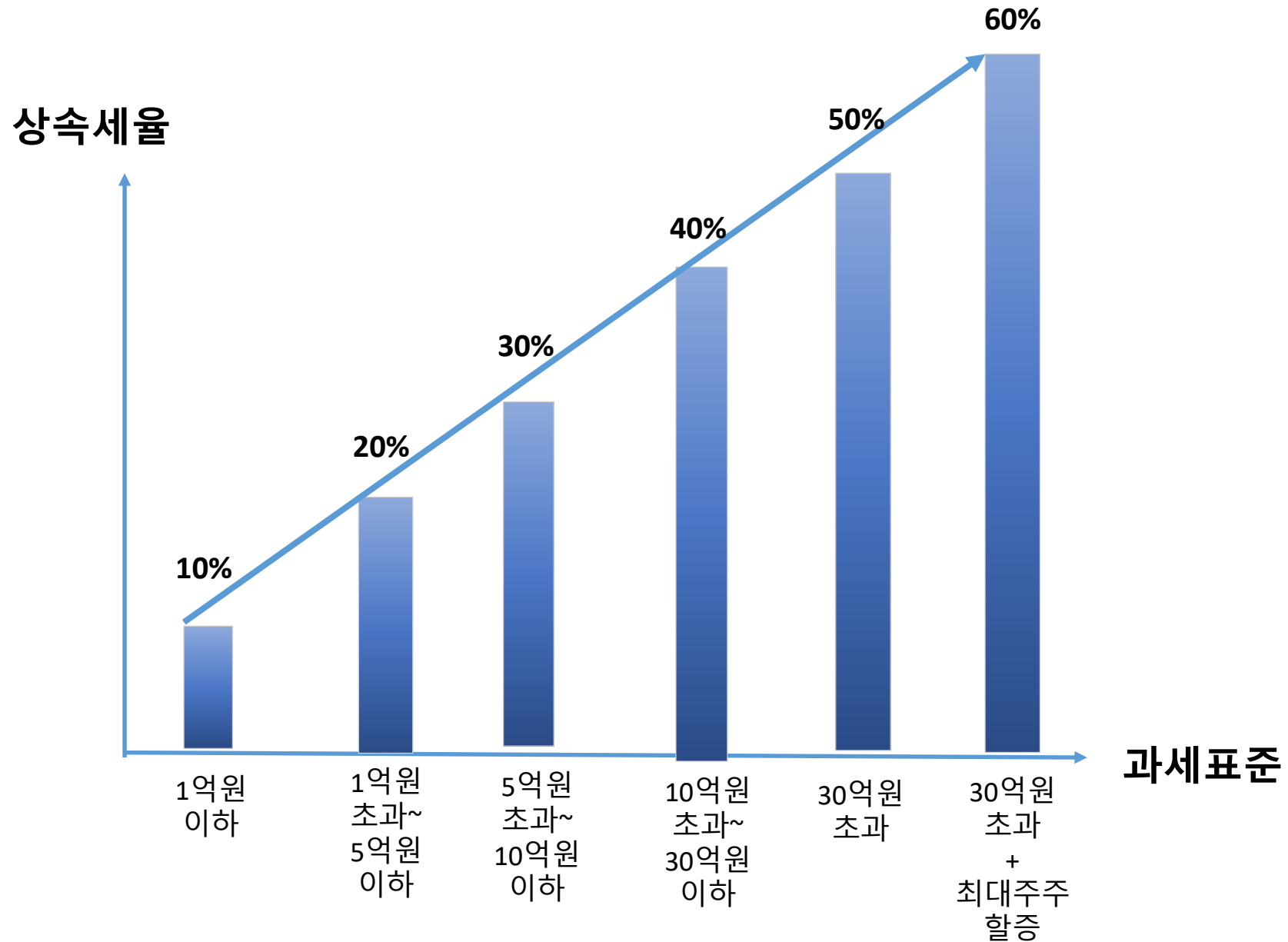
"아버지, 돈으로 주세요"...가업승계 매물 잡기 분주한 PE

천문학적 상속세에 매각카드 꺼내는 기업들 내 자식 더 잘 키울 사모펀드 찾는 경우도
펀더멘털 좋은 알짜매물 줄줄이 물밑 협상 미덕 아냐..."절세 차원 M&A 봇물 터질 것"

기업승계 업체, 매각때보다 부도확률 50% 낮아

최향미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의 '중소기업의 장수에 대한 연구' 논문은 기업 승계 업체의 생존 가능성이 전문경영인 체제나 타 법인에 인수되는 기업에 비해 높다는 점을 실증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상속·증여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승계 관련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상속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 상속세율과 상속·증여세 비중의 국제 비교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보다 높음
 -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은 최고세율이 40%대
 - 상속세 없는 국가: 캐나다,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상속·증여세 부담도 높음
 - 한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은 0.68%로 프랑스(0.70%) 다음으로 높음

국가별 상속세 최고세율과 상속·증여세 부담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2022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OECD 평균	26	
독일	30	0.24
영국	40	0.27
미국	40	0.15
프랑스	45	0.70
한국	50	0.68
일본	55	0.51

□ 상속세제의 낙후와 경직성: 시대변화와 경제규모의 반영 미흡

- 1999년 최고 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리고, 최고 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춤
 - 세율과 과표는 25년 동안 변함없음
 - 1997년 정해진 공제한도 10억원(일괄 5억원·배우자 5억원)은 27년째 유지
 - 자녀공제액은 2016년 상향 조정(3000만원 → 5000만원)
- **현행 상속세가 시행된 2000년 이후 2023년까지 한국경제 규모는 3배 이상 성장**
 - 총상속재산의 가치는 11배 이상 증가

상속세제 개편 이후 경제규모 성장			
경제지표	2000년(A)	2023년(B)	B/A
명목GDP	676조원	2401조원	3.6
1인당 총국민소득	1428만원	4725만원	3.3
총상속재산	3조4134억원	38조9597억원	11.4

자료: 한국은행, 국세청

□ 상속세 대상의 확대와 상속인의 고령화

-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 대폭 증가**
 - 현행 세제에서 10억원 넘는 아파트 한채를 보유한 중산층도 과세 대상 포함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2억1718만원(서울부동산정보광장 '24년 6월 기준)
 - 서울 아파트(193만1000 가구) 중 10억원이 넘는 비중이 39.9%(77만2400 가구)
 - 과세 대상 전국 아파트 비중은 '24년 5.9%에서 '35년 32.6%로 증가 전망
-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상속 연령도 고령화하여 '노노(老老)상속' 확대**
 - 80~90대 고령 부모가 50~60대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하는 비중이 증가
 - 80세 이상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아 상속세 납부한 비중이 2010년 33%(1344건)에서 2022년 52%(1만9506건)로 늘어남
 - 70대 피상속인까지 합하면 77%로 급증
 - **'노노상속'이 부의 고령화로 소비와 투자 위축시켜 경제의 활력 저하 초래**
 - 청년층의 자산결핍 심화로 결혼과 출산 저하로 연결돼 인구 감소 가속화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노노상속' 이 사회문제화**
 - **'생전 증여'와 '조손 상속·증여' 로 청장년층으로 자산 이전 활성화하여 경제순환 촉진**
→ 조손 상속·증여 시 비과세 혜택 인센티브 부여

□ 증여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 증여세도 최고세율이 50%이며,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록 세율이 높아짐
 - 과세표준이 높아질 경우 일정 금액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세부담 조정

증여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일정 금액의 공제를 제외한 금액
 - 수증자와 증여자 간의 관계에 따라 차감되는 공제액이 달라짐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 간 합산 공제 금액)	비고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증여한도는 2천만원 직계비속 자녀가 혼인·출산하면 1억원 추가 공제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친
그 외의 자	0원	

□ 증여세제의 한계와 문제점

- 증여세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이 경제규모의 성장을 반영하지 못함
 - 증여재산 공제액 한도도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음
 - 배우자공제(6억원)는 2009년부터, 자녀공제(성년 5000만원)는 2014년부터 유지
 - 미성년자공제(2천만원)는 10년 용돈 수준에 불과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녀공제 5000만원(10년)으로 집을 사주기 어려움
 - 아파트 한채 사주며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세부담이 커짐
 - 자녀에게 집 사주는 문화가 편법증여 조장
 - '24년 1월부터 혼인·출산공제가 적용되어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는 각각 본인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증여받아 총 3억원을 세금없이 전세나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
 - 현재 부동산 가격을 고려하면 여전히 신혼주택 구입에 부족한 공제한도
 - ⇒ 증여를 '부모 찬스'로 간주하는 국민 정서의 영향으로 공제한도 대폭 상향이 어려움
-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여 '생전 증여'와 '조손 증여' 확대 필요
 - 일본은 증여 자산이 손자녀 교육비, 거주용 주택 구입비, 결혼·출산·육아 등 비용으로 쓰일 경우 비과세 혜택 부여
 - 우리나라도 증여세를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저출산·인구감소' 대책으로 접근 필요



상속·증여세 개편방안



□ 2024년 상속·증여세 개편안

◦ 2024년도 세제 개편안은 27년만에 대대적이며 파격적 상속세 개편내용 포함

1.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를 40%로 하향 조정
 - (1)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세율 50% 구간 폐지
 - (2)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세율 40% 구간 신설 → 고액자산가 혜택
 - (3)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폐지 → 기업승계 지원**
2. 상속·증여세 최저세율 10%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3. 자녀공제 금액을 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증액
 - 자녀 2명 기준 12억원 공제 (현행 일괄공제 5억원보다 7억원 ↑)
 - ※ 기초공제(2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30억원)는 현행대로 유지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및 세율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현행		개정안	
자녀공제 금액	인당 5천만원		인당 5억원	

□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

1. 대상 확대: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상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2. 공제한도 상향: ①밸류업, ②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공제한도 2배 확대
 - 가업영위기간 10년/20년/30년 이상: 300/400/600억원 → 600/800/1,200억원
- ③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한도 없음

	현행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①중소기업 ②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전체 중소·중견기업 (상출기업집단 소속 제외)	
공제한도			①밸류업, ②스케일업 우수기업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20년	300억원	10~20년	600억원
	20~30년	400억원	20~30년	8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200억원
			③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 없음	

□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구분	가업상속공제 요건
① 밸류업 우수기업	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②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u>주주환원액</u> (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일 것
② 스케일업 우수기업	① 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u>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u> 이 아래 둘 중 하나를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5% + 연평균 증가율 5%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3% + 연평균 증가율 10% ② 5년간('25~'29년) <u>고용을 유지</u> 할 것
③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	○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이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u>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u> - <u>기회발전특구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u>가 전체 근로자의 <u>50% 이상</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란 정부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비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구역 • 현재 지정된 지역은 대전·대구·부산 등 3개 광역시와 경북·전북·전북·전남·제주 5개도 → 세부적으로 대전 유성구, 부산 동구, 대구 달성군, 전북 전주시, 경북 구미시, 전남 광양시,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 포함

□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 추가

	현행	개정안
사업무관 자산의 범위	비사업용 토지,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주식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부동산, 대여금 등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 제외



맺음말



□ 기업상속·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개편안의 기대효과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 가장 큰 효과 예상
 - 최대주주 20% 할증에 최고세율 더한 현행 60%는 징벌적 과세
 - 중소기업 경영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가혹할 정도로 높은 상속세 부담
 - 중소기업인과 2세 경영자 90% 이상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가업승계 장애로 인식
 - 개편안은 가업상속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3 수준으로 경감(60% → 40%)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의 성장잠재력 활성화 효과 기대
 - 공제대상 요건에서 매출액 기준 폐지하여 중소기업의 성장동기 촉진과 중견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 기대
 - 공제한도 상향 조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밸류업)과 경제적 기여도(스케일업) 제고하여 명문 장수기업의 기업승계에 긍정적 효과 예상
 - 특히, 지방경제 활성화를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게 무제한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한 것은 파격적

□ 기업상속·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개편안의 기대효과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사전가업승계) 공제한도가 빠진 것은 아쉬움

- 가업승계에 적용되는 증여세 개편안은 사업용 자산범위 확대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에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추가

<현행 사후가업상속과 사전가업승계 비교>

		사후가업상속	사전가업승계
적용대상		①중소기업 ②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①중소기업 ②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공제한도		최대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최대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기본공제		-	10억원
세율		상속세율(10~50%)	과세표준 120억원 이하: 10% 120억원 초과: 20%
사 후 관 리	기간	5년	5년
	업종	대분류 내 변경 허용	대분류 내 변경 허용
	고용	근로자수(총급여) 5년 평균 90%	없음
	자산	40% 이상 처분금지	없음
	지분	상속받은 지분 유지	상속받은 지분 유지

□ 기업상속·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개편안의 기대효과

◦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기업상속공제를 뒤따라 공제한도 증액

- ①밸류업, ②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기업상속 공제한도 2배 확대 조치가 사전기업승계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
- ③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게 기업승계 증여세 공제 한도를 없애면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서는 사후(死後) 상속보다 '사전(死前)증여' 확대 필요

- 경영자가 사망해야 발생하는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 통한 기업의 노하우 전수가 용이
- 계획적 승계가 돌발적 승계보다 기업의 영속성 측면에서 훨씬 바람직함
- 독일의 경우 증여와 상속 간 세제 지원에 차이가 없음
- '사후상속'과 '사전증여'에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불분명

※ '기업상속공제'를 개편할 경우 자동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도 연계하여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 장려

◦ 전반적으로 상속세에 비해 증여세 개편의 폭이 미흡함

- 증여재산 공제액은 상향 조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함
- 증여세 최저세율 10% 적용되는 과세표준 확대(1억원→2억원)도 미흡함
- 30억원 이상 고액자산의 증여세 경감(50%→40%)이 가장 큰 혜택인 반면,
10억원~30억원 증여세는 그대로 유지(40%)되어 중산층 세부담 경감 명분 퇴색
 - '부모찬스'와 같은 '편법증여'는 여전히 성행할 것임
 - 국가징수권 vs. 사유재산권의 대립 → 조세 정의 < 조세 저항
- 고령화시대에 증가할 '노노상속'에 대한 선제적 대응 결여
 - '부의 대물림'이라는 정서에 가로 막혀 '생전증여'와 '조손 상속·증여' 시도 못함

※ 앞으로는 개인이건 기업이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필요

